

與 “시간 허비말라” vs 野 “사과부터”

3당 국회 정상화 실무협상서 큰 입장차 다시 확인

與, 의총서 野 요구 수용 여부 의견수렴...분수령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각각 요구하면서 절충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정상화 해법을 놓고 '3인 3색' 수준의 공개 발언을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바란다”며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충돌 과정에서 있었던 반목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렇지만 일방적인 역사지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27일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민생법안 심사 등을 진행하고, 늦어도 6월12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는 시간표를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요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강경한 의견이 주를 이룰 경우 여야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

의에서 “패스트트랙은 불법 무효가 자명하다. 절차와 내용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제 대총 국회만 열면 된다고 유아무야할 생각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 무효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사과와 철회,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국민부담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이 한국당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3당 원내 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다.

민주당이 ‘시간’에, 한국당이 ‘사과’에 각각 방점을 찍고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이는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 각 당 내부 분위기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말을 전후해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구체적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필요 민생법안 전달받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법안 정책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로부터 패스트트랙 처리가 요망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11개 민생법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황교안에 집중포화...“탄핵당한 사람들이 주제넘게 나서”

黃 ‘동성에 반대’ 입장표명도 비판...“소수자 차별적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반발하며 ‘북한 대변인’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황 대표가 원외 다니시며 여러 강경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 강경 발언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말씀 삼갈 것은 삼가시고, 총리와 대통령 대행을 지내신 분이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하는 발언은 어찌까지 만 하고 내일부터는 안 하셨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황 대표는 원외에서 더 이상 ‘유아틱’한 막말 논쟁을 접하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황 대표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원칙과 신뢰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황 대표도 반드시 동참해 세월호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 하라”고 촉구했다.

황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북한 독재 운운하며 북한 대변인이라는 전혀 생뚱맞은 발언을 한다”며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해 탄핵당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곳까지 주제넘게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 글로 “황교안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월의 노래 ‘산 자여 따르라’(임을 위한 행진곡)를 완창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저는 ‘못 부른다’에 한표”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가 공개적으로 ‘동성에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도 “황 대표가 성적 취향에 대해 개인적, 정치적으로 반대하며 차별적 발언을 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

병 환자에 비유하며 막말을 했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한국당의 편협하고 차별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만큼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여야 충돌 과정에 있었던 반목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일방적 역사지지는 가능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며 “(야당은)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동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22일 ‘무늬만 무상보육’ 방지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육원가에도 못 미치는 무상보육비용을 시정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차별을 해소하며 ▲조손 가족의 손자녀도 보육 우선 제공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동철 의원은 “그간 정부는 영유아 한 명을 보육하는 데 한 달 동안 드는 적



정 금액을 산정해놓고서도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무늬만 무상보육’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서 “보육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영유아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국가책임보육의 구현이 중요하고, 차별적 지원 기준을 해소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김기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절실”

전남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e-모빌리티’ 성공을 위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태 전남도의원(순천1)은 22일 “그동안 자동차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남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산업이 e-모빌리티”라며 “e-모빌리티의 경우 국내시장이 각종 규제로 인해 중국 저가제품에 잠식당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말했다.

특구 예정지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대 자동차 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으로 총 169만5천700㎡의 면적과 약 40.4km의 도로를 포함하는 규모다. 지정기간은 4년으로 오는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다. 전남도는 24일 특구 계획을 중기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임재만 기자

최선국 “공원일몰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을”

전남도의회는 22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실제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년 7월1일자로 일몰될 위기에 처해있어 공원 토지매입비의 국비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내년 실효될 도시공원은 전남도의 경



우에만 151개소 28.3㎢에 달하고 실효대상 공원부지 토지매입 시 총 보상비는 1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대상 공원 중 상당수는 정부가 1970년대 공원 지정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인력·재원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한 것이나 현 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임재만 기자

도의회, 한빛원전 재발 방지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한빛원전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 안전위원회 직무태만을 강력히 규탄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급격하게 치솟아 원전 운영기술자 집 기중 제한치 5%를 초과해 불과 1분만에 4배까지 증가했지만,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12시간 동안 원전을 가동하는 등 심각한 운영 결함을 드러냈다.

이번 결의안은 한빛원전의 운영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빛원전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세일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이번 사고는 그동안 한빛원전 내 빈번한 화재사고와 원전 정지 횟수가 점점 늘어나 국민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현재 모집 과정

매월훈련수당 4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훈련사업에 따라 차등지급)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 기 공 사

(5/7 개강)
[교육내용]
- 동력제어반공사, 동력설비공사
- 배관공사, 전열공사, 조명공사
-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취득 자격증]
-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 전기산업기사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5/16 개강)
- 어려운 필기, 실기 시험 없이 훈련과정 수료 후 자체 평가를 통해 자격 취득
- 직업상담사 실무능력까지 훈련가능
*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취업성공패키지기관 전문상담사
-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 상담 및 취업지원관
- 전국 281개 시, 군, 구 소재 공공 직업안정기관
- 2,100개의 민간 유료 직업소개소
- 24개의 국외 유료 직업소개소 등

태양광발전설비

(5/20 개강)
[교육내용]
- 시스템운영 및 유지, 안전관리
- 발전장치 전기시설 및 토목공사
- 태양광발전연계장치, 전기CAD
[취득 자격증]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소발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냉 동 공 조

[교육내용]
-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기계
- 자동제어설비, 냉동설치시공
- 가스용접, 보일러취급, 보일러시공
[취득 자격증]
- 냉동공조기계기능사
- 가스기능사
- 에너지기능사 (6/3 개강)

자동차(전기전자)정비

[교육내용]
- 엔진점화장치정비유지보수
- 하이브리드전기장치정비
- LPG/LPI전자제어장치정비
[취득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사 (6/3 개강)
- 자동차 차체수리 기능사
-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